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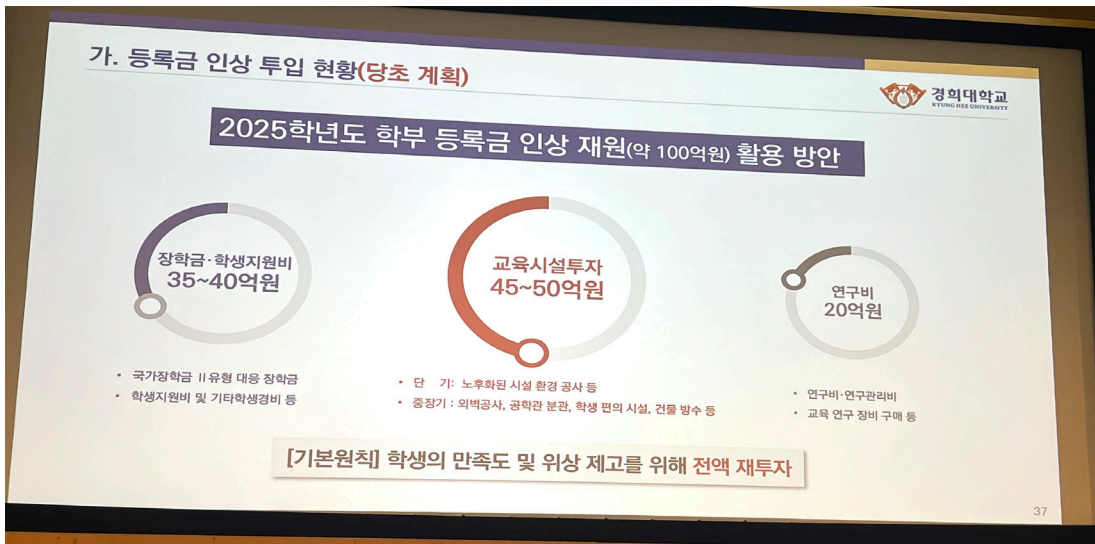
시설 노후 · 물가 상승, “등록금 인상 불가피” 3.19% 이내 예상...“인프라 개선에 투입”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026학년도 등록금이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이내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6년 만에 등록금이 5.1% 인상됐으며, 학교 측은 인상분을 토대로 교육시설 투자에 73억 원, 장학금 및 학생지원비에 5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대학 재정 현황 설명회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양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등록금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양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을 비롯해 각 주체별 학생회장장과 비대위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학 재정 현황 ▲등록금 인상분 집행 내역 ▲향후 등록금 인상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팀장은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약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집행 내역을 보고했다. 실제로는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총 1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획은 ▲교육시설 투자 45~50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 35~40억 원 ▲연구비 20억 원이었



지난 5일 대학 재정 현황 설명회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재원의 집행 내역을 보고했다.

(사진=김규연 기자)

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시설 투자에 73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에 50억 원이 투입됐다. 연구비의 경우, 등록금 인상분이 아닌 신규 확보된 연구비 재원을 통해 충당됐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교육부가 공고한 2026학년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이내에서 등록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현실화는 교육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매년 확보된 등록금 수입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전액 소진하는 구조로 운용한다”며 “등록금 인상분 역시 교육 환

경 개선과 학생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팀은 “노후 건물 개보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지관리 비용과 자재비·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하다”며 “1970년대에 건립된 체육대학 등 50년이 넘는 건물들은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수년간 재정 동결로 인해 2017년 서울캠 스페이스21 건물 준공 이후 신축이 전무했을 정도로 시설투자 여력이 고갈된 상황이다. 김 팀장은 “내년 원자로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연동

한 등록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학생과 본부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등록금이 10년간 동결된 동안 교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 팀장은 “동결된 해도 있었고 인상 하더라도 1~2%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재정 위기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온 결과”라고 답했다.

등록금 인상분 집행의 투명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민성 회장은 “다른 대학처럼 인상이 실제로 학생 복지나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김 팀장은 “인상분 100억 원 대비 123억 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결산 자료로 증명되듯, 우리 대학은 인상분을 적립하지 않고 전액 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태희(약학과 2023) 약학대학 학생회장은 “단위별 등록금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법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팀장은 “계열별 등록금 수준이나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약학대의 등록금은 신설 당시 다른 대학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지금도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예산팀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외에도 ▲경희의료원 등 부속병원 전입금(260억 원) ▲법인 전입금(130억 원) ▲외부 기부금(100억 원) ▲교내 상가 임대 수입(100억 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평화의 전당 대관, 캠퍼스 내 영화 촬영지 제공 등 공간 자산을 활용해 연간 약 1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등록금 의존율은 국고 지원금 배분 방식이나 기숙사 회계 처리 방식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해 교육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인프라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면 등록금 현실화라는 정공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실 정치적 발언에 민감...“정서적 양극화가 원인”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교수님 정치 색깔 자체 좀 ππ”, “교수님 정치 성향 갈수록 심해지네”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강의평에는 교·강사의 강의실 내 정치적 발언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견해가 자주 비친다. 학생들은 왜 수업 내 정치 발언에 민감할까. 교수들의 생각은 어떨까. 교·강사 3명과 학생 3명의 의견을 통해 이를 살펴봤다.

교수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의실 내 정치적 수용도가 낮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최현진(정치학) 교수는 “2014년 처음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정치적 발

언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은하(한국문학) 교수 역시 “지금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히 나뉘어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힘든 환경”이라며 “학생들이 불편할 만한 발언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윤성이(정치학) 교수는 “학생들의 수용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위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론 수업에서 자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강의실 내 정치 발언이 민감해진 배경으로 교수들은 정서적 양극화를 꼽았다. 최 교수는 “사회 전반에 급격히 진행된 정서적 양극화가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내가 정의롭고 내

생각이 곧 민주적이라고 믿게 된다”며 “나와 다른 생각은 반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이 학생들의 수용 방식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교수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진 소통 구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김 교수는 “온라인 소통이 ‘부족화’된 집단끼리 혐오 발언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질돼 오프라인 강의실의 대화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발언’이란 주로 특정 정치인의 행보를 비

평하거나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언급하며 교수자의 개인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강의실 내 정치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거부감은 아니다. 이들은 대체로 해당 발언이 수업과 연관된 학문적 내용이면 수용하는 분위기다. 김태은(회화 2025) 씨는 “교수의 정치적 견해는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사회적 맥락이나 비판적 사고를 돕기 위한 예시라면 수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손성현(hospitality경영학 2025) 씨는 “과하지 않다면 일부 정치적 견해는 은연중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와는 별개로 학점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학생들의 자기 검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씨는 “레포트나 답안지를

작성할 때 교수의 관점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술했던 경험 있다”고 말했다. 김정연(사회학 2024) 씨는 “교수의 정치 성향에 맞춰야 점수를 잘 받는다는 루머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수 성향에 따라 과제의 주제 선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대학이 지켜야 할 본질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대학은 권력 투쟁의 장이 아닌 사회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곳이어야 한다”며 “교수자의 발언은 개인 판단이 아닌 학문적 이론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중립이라는 강박에 갇혀 진실한 대화나 교육적 시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